



## 국무조정실,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

- ▶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, 지하 주차장 안전강화 방안 등 논의
- ▶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논의를 통해 9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추진

□ 8. 13.(화) 국무조정실은(실장 방기선)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\*를 개최하였다.

\* (참석) 국무조정실(주재), 행안부·산업부·환경부·국토부 차관, 소방청 청장

□ 정부는 '24. 6.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'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\*(행안부 단장)'를 구성하고,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~8월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·안전 여건을 점검하였으나,

\* ①산단 매설물 개선반(반장: 산업부), ②지하충전소 개선반(반장: 환경부), ③전지 화재 개선반(반장: 행안부), ④원전·댐·통신망 개선반(반장: 행안부) 등 4개 반으로 구성

○ 8.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,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.

□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·검토해온 △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△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△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

○ 향후 실현 가능성,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이와 함께 대책수립 전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\*과 함께,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.
  - \* ▲현대·벤츠 무상점검 지원(8.13) ▲현대(8.10)·기아·BMW(8.12) 전기차 배터리 정보 既공개, 벤츠도 금일 공개 예정(8.13) ▲타 기업에도 무상점검 및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예정
- 아울러,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“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,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줄 것”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.
- 앞으로 정부는 업계·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율한 후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.

담당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	이호기 (044-200-2341)
		담당자	사무관	윤남웅 (044-200-2352)
담당부서	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류필무 (044-201-6880)
		담당자	사무관	강 찬 (044-201-6882)
담당부서	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지만석 (044-20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안시준 (044-205-4502)
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	이영호 (044-203-4320)
		담당자	사무관	안준호 (044-203-4322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방현하 (044-201-3835)
		담당자	사무관	임유현 (044-201-3838)
담당부서	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	책임자	과 장	박진수 (044-205-7520)
		담당자	소방령	정홍영 (044-205-7530)